'농업·농촌 기본법' 개정 착수

농업인 단체 등 전문가협의회 구성

농업·농촌 기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협의회가 구성, 올 9월 국회제출을 목표로 활동에 들어갔다.

농림부는 지난달 12일 농업·농촌 기본법 개정 전문가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개정내용에 대한 기본방향과 범위 등을 논의했다. 전문가협의회는 농업인 단체와 소비자 및 생산자 단체,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농업인력 육성대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식량 자급율 목표설정, 통일 농정에 대한 실천방향 제시, 도·농간 소득균형 조항 신설, 지방농정 활성화 방안 제시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농림부는 앞으로 전문가협의회를 상설화 해 주제별로 분석·검토작업을 하고 범 국민적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7월 중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다.

농산어촌개발 5개년 계획 확정

2009년까지 5년간 20조3천억원 투자계획

정부는 농어촌을 국민의 20% 이상이 거주하는 도·농 상생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5년간 20조3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국무총리 주재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05~'09)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이 기본계획에는 농림부와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 등 15개 부처가 참여하였으며, ① 농어촌 복지기반 확충 ②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③농어촌 지역개발 ④ 농어촌 복합산업 활성화 등 4대 부문에 총 20조 3천억원을 투자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을 국민의 20%이상이 거주하는 도·농상생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위와같은 중기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의하면, 제1차 계획기간 동안은 도시에 비해 낙후된 농어촌의 복지·교육 인프라 확충 및 지역개발 촉진으로 중소도시 수준의 생활환경을 조성해서 농어촌 주민의 이촌을 최소화하고, 1차 중기계획이 끝난 제2차 계획기간('10~'14)중에는 도시인구의 귀농촉진 등을 통해 국민의 20%이상이 농어촌에 거주될 수 있도록 농어촌의 삶의 질을 대폭 높인다는 계획을 강구하고 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강화

전국 기동단속반 편성, 농관원

올해부터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및 수사가 과학적으로 대폭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정학수)은 최근 전국 도 단위 기관별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및 수사를 전담하는 '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전국에 26개 반 57명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들어갔다.

기동단속반은 앞으로 부정유통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기획수사를 추진하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특히 단속의 효율성과 기동력을 높이기 위해 기동단속반에 개인 휴대단말기(PDA)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정유통 신고를 받으면 위성항법장치(GPS)로 위치를 추적,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고 위반업체 적발시 즉시 상습위반 여부를 조회해 단속이 가능하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대폭 개선해 효율성을 높이고 기동성을 강화, 농산물 부정유통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전화(1588-8112)

축산업등록제 참여율 상승

무허가 축사, '가축사육시설' 개념으로 등록가능

축산업 등록제 본격 시행 이후 올 들어 등록율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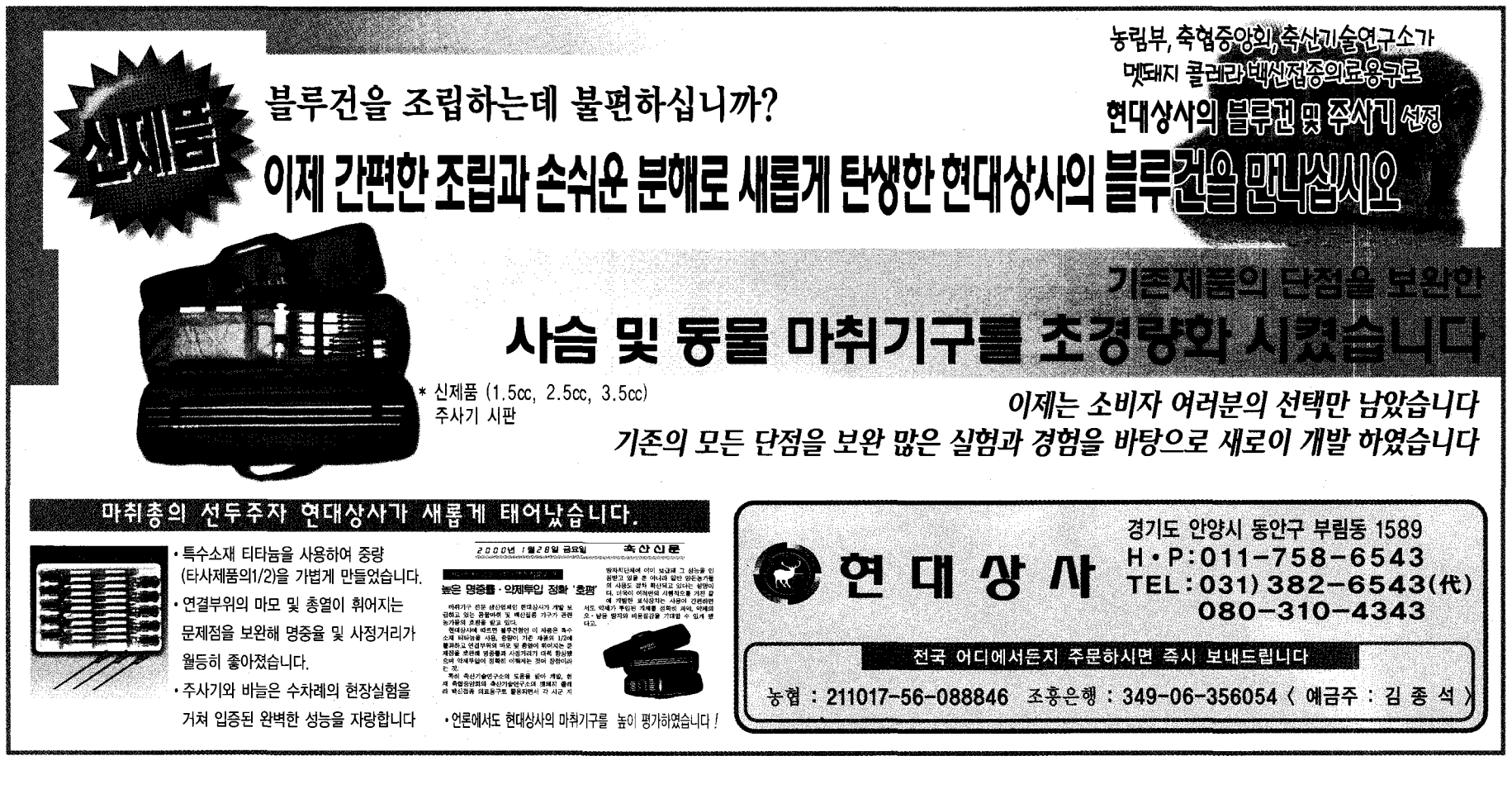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축산업 등록 상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 대상농가 3만9천87호 중 1만9천8백23호가 등록해 50.7%의 실적으로 나타났다. 등록율 증가 추세도 지난해 12월 27%를 나타낸 이후 올 1월 32.2%, 2월 38.5%로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축종별로는 한·육우가 1만4천5백43농가 중 1만5백2농가가 등록을 마쳐 72.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양계로 50.3%이다. 부화업과 종축업은 이미 대상농가 모두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등록율이 저조한 낙농은 대상농가 8천5백45농가 중 2천1백63농가로 25.3%, 양돈은 대상농가 9천4백48농가 중 39.4%인 3천7백20농가가 등록을 마쳤다. 오리는 6백22농가중 1백43 농가가 등록했다.

축산업 등록기간은 올 12월 26일까지로 소독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 등 추가적인 시설설치 없이 현 상태의 축사 등을 등록하면 된다. 또 등록제에는 '축사' 대신 '가축사육시설' 개념이 도입돼 무허가 축사도 현 상태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검역원, '클린 콜' 서비스 실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달 15일 민원인에 대한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를 전화로 모니터링 하는 '클린 콜(Clean Call)' 서비스 개시를 선포했다.

검역원은 클린 콜을 통해 축산물 수·출입 신고 등 본·지원의 모든 종결 민원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원장이 직접 체크, 필요한 경우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